

금물살 탄 한-중 FTA 어디로 가나

갑작스런 북한 변수가 상황 변화 이끌어
5월 이전 협상 개시 선언할 듯



처음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이었던 쪽은 중국이었다. 2004년 양국 간 민간 공동 연구와 2006년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의 출범은 모두 중국이 주장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윈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強) 부총리 등 중국 수뇌부는 우리 관료와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조속한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촉구하곤 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은 “충분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외신에서 “한국과 중국이 2012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조차 공식 입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차피 정부가 할 일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새 정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의 협상 개시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식 절차 이미 시작

정부 차원의 한-중 FTA 논의는 1월 말부터 시작됐다. 통상교섭본부는 1월19, 20일 지만수 동아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박 본부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서는 찬반을 떠나 한-중 FTA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와 협상 전략 등에 대한 난상토론이 이틀에 걸쳐 8시간 동안 이어졌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월25일 간담회 소식을 언론에 전하고 “한-중 FTA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2월까지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다양하게 열겠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했을 뿐이지 FTA 협상의 첫 공식 절차인 ‘공청회 개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FTA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꼽는 한-중 FTA의 장점 중 하나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유지다. 사진_ 연합뉴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을 비롯해 중간재, 부품 수출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은 그러나 이후 보름도 채 안 돼 급진전했다. 외교통상부는 2월9일 자 관보에 공청회를 2월24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게재했다. 이런 속도라면 공청회 이후 FTA 민간자문회의와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FTA 협상 개시 선언 이전 단계의 공식 절차가 이르면 3~4월 중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본부장은 2월6일 라디오방송에서 “한-중 FTA 협상 개시 시기가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이전일 수도 있다”고 말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한-중 FTA 입장 선화… 배경은 ‘북한 변수’

정부는 왜 두 달 사이에 입장을 갑자기 바꿔 한-중 FTA 준비를 서두르는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기점으로 정부가 한-중 FTA에 적극 나서는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권력 체제 급변에 따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북한의 혈맹인 중국을 FTA라는 정책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커졌다는 이른바 ‘FTA 당위론’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중 FTA의 장점으로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안정 기여’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등을 꼽아 왔다. 올 1월 초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준비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핵심 과제로 다뤘다. 정상회담 이후 FTA를 향한 정부의 행보는 빨라졌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국과 같은 대국과의 FTA는 경제논리 이상의 것이 함께 섞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한-중 FTA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논리를 뛰어넘는 정치·외교·안보 현안이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탄 배경이라는 해석이다.

FTA 협상 전략과 향후 전망은?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2010년 기준 1천 884억 달러로 한-미 간 902억 달러의 두 배도 넘는다. 국내 총생산(GDP)은 우리나라가 1조 달러로 중국(5조9천억 달러, 세계 2위)의 6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1천29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842억 달러(16.6%)였다. 교역 규모가 큰 만큼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지대할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휴대전화, 자동차, 기계 등 전략 품목을 비롯해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체결 후 10년간 과일 10억2천만 달러와 채소 9억7천700만 달러 규모의 생산 감소가 초래되는 등 농수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가 완제품 수입 확대로 중소기업도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별 효과에 맞춰 협상 전략을 나누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우선 상품 분야는 자유화 협상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초민감 품목은 자유화에서 제외하고 민감 품목은 자유화 기간을 길게 가져가거나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초기 협상에서 민감성 부분에 따른 분쟁보다는 타격을 전제로 서로에게 부담 가지 않는 수준의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민감 품목 보호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담보하겠다는 협상 전략에는 전문가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선분은 FTA가 양쪽 경제에 큰 부담이 되리라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FTA가 몰고 올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선분은 낙관을 경계했다. 

유경수 경제부 기자 yks@yna.co.kr